

“진통제 처방 아닌 근본대책을”

■ 고유가 대책 농어민·시민 반응

“세제 혜택 등 미봉책 불과

면세유·부채 실질 대책을”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농어민과 근로자, 저소득층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면세유 가격 동결, 농어가 부채 경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 윤정원(36·여) 사무국장은 “지난해 초 1당 600원 선이던 면세유 가격이 올해 1천300원까지 올랐다. 쌀값은 그 대로인데 면세유 값은 두 배 이상 올랐다”며 “면세유 가격을 조금 내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장기적으로 면세유 가격 동결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원주(54) 의장은 “일시적 세제혜택은 정유사이나 도움이 될 뿐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가상승을 막든가 면세유 적용 범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중석(47) 무안군 농민회장은 “면세유 가격이 너무 올라 유류세 절반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번 대책은 민심을 안심시키는 일종의 ‘진통제’일 뿐”이라며 “농민들의 경우 정부의 농업 대책에 대해 불신의 끝이 깊은 상태다. 결코 신뢰할 만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쓴소리



당정 비상시국 민생대책 숙의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 협의에서 한승우 국무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세금환급 등 10조원에 달하는 민생안정대책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를 했다.

식료품 가게를 하는 T식품 주인 강보(55·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는 “경유값 상승으로 한 달에 20만 원 이상 기름 값이 더 든다. 정부가 연간 24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잠시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줄 순 있겠으나 장기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수 잡수기수협 김정천(48)씨는 “기름값은 물론 고기 잡을 때 필수인 로프와 그물, 심지어 위판 수수료까지 모두 올랐지만 고깃값은 10년 전과 같다”며 “유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세제 혜택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주 김병만(52·목포시 산정동)씨는 “유가 대책을 마련하면 뭐하느냐. 지금 당장 좋을지 모르겠으나 언젠간 또다시 오르게 마련이다”며 “유가 상승을 막든가 면세유 상한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농민 박병우(58·담양군 고서면)씨는 “최근 영농 기계화로 대부분 농민들이 경유를 연료로 하는 농기계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농기계 구입비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부채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野 “민생현안 해결엔 턱없이 부족”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8일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과 관련, 민생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며 근본적인 물가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장단 합동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으로 경기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단 뒤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대책은 국회 개원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쇠고기 재협상을 마무리짓고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러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 경기침체기인지 대량실업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국민의 공감 대 속에서 주경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이 고유가 대책을 포함한 민생종합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를 고유가 대책 대부분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계속 등원을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는데 따른 비판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9일 별도의 고유가 정책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정당은 정부의 대책마련이 ‘민심달래기’식의 임시방편 대책이라며 쇠고기 재협상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환급금·보조금 형태로 지급

■ 고유가 대책 세금 어떻게 돌려 받나

근로자는 회사 통해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신청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 농·어민,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빼기 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요금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인 경우 최고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만원, 3천만~3천600만원은 연 6만~18만원을 지원 받는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는 연 24만원, 2천만~2천400만원은 연 6만~18만원을 환급받는다.

저소득층은 유가보조금 24만원을 드록 제일에 준다.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환급받는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 구매에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다음달 15일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만 청구한다. 카드사는 주유소에 결제일 이를 후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해주고 국세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세액을 환급해 준다.

◇유가보조금 받는 절차=저소득층과 장애인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통장으로 매달 말일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연탄 지원대책의 수혜도 볼 수 있다. 이와 두바이유가 1당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유류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또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이 택시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쇠고기 정국 최대 분수령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쇠고기 파고를 넘기 위한 국정재신책을 잇따라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으로 있어

‘100만 죽물대행진’이 예정돼 있는 이번 주가 한달여 이상 계속된 쇠고기 정국의 향배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제로 상태다. 금주에만 효순·미선양 6주기(13일)를 비롯해 초대형 집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정부 쇠고기 안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0조5천억 규모의 민생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금주 중에 등록금과 통신비 인하 방안, 비정규직 대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더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쇠고기 부문의 정책적 보완에도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돌아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이미 동반퇴진 의사를 밝힌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내각도 상당 부분 교체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폭넓은 확대된 전면적인 인적쇄신안을 오는 10일 이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 국민들이 “충분하다”고 환답하지 않을 경우 두달째로 접어든 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시위 양상도 더욱 격렬해지면서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화교소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광고

- 모집 학년: 1학년(1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 대상: 2008년 6월 이전 입학한 유치부 학생
- 모집 일정: 2008년 6월 10일 ~ 6월 17일
- 모집 학기: 2008년 6월 10일 ~ 2009년 5월 31일
- 모집 학교: 광주화교소학교
- 모집 학제: 유치부

